

# 서울정책포커스

2007. 8. 20 제39호

##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보육 및 양육지원정책 발전방안

김선자(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 < 목 차 >

요약

1. 문제의 제기
2. 보육 및 양육지원 현황 및 문제점
3. 보육·양육지원정책의 주요 이슈
4. 보육·양육지원정책의 기본원칙
5. 서울시 보육·양육지원정책 발전방안

## 요 약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1년 이후 빠르게 하락하여 2005년에 1.08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에 이르렀으며 서울은 이보다 더 낮은 0.92명으로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결혼연령의 상승과 출산자녀수 감소로 인해 야기된 저출산은 소득 및 고용 불안정,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자녀양육 부담 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다. 특히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아동양육의 물리적, 시간적, 경제적 부담인 것으로 분석되어 보육·양육지원정책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 핵심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출산을 제고뿐 아니라 저출산 시대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여성의 노동참여 확대와 국가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영유아 보육 및 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보육예산의 획기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신뢰할만한 시설 및 다양한 서비스의 부족으로 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적 지원체계가 미흡하고 시설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이 대부분이어서 서비스 및 정책 체감도는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최근 보육·양육지원정책과 관련하여 보편적인 자녀양육지원정책인 아동수당 도입과 기본보조금제도의 재검토를 포함한 자녀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지원과 영아보육, 비공식보육을 포함한 아동양육지원의 다각화와 관련된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으며 보육시설 확충과 동시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보육·양육지원정책의 기본원칙으로 부모의 다양한 보육·양육 욕구 충족과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 보장,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아동양육의 공공화, 모든 아동과 가정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지원 등을 제시하고, 서울시의 보육·양육지원정책의 발전을 위해 국공립시설의 현실적인 확충방안 모색과 기능 재정립, 보육 서비스의 질 관리, 다양한 양육지원서비스의 활성화, 비공식보육에 대한 지원, 지역 사회 자녀양육지원체계 구축 및 취약계층 아동과 가정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보육·양육 지원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 1. 문제의 제기

### ○ 저출산 현상의 고착화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1년도 이후 빠르게 하락하여 2005년에는 인구 대체수준인 2.1명의 절반에 불과한 1.0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에 이르렀음. 1980년에 87만명이던 출생아 수도 44만명으로 감소하였고, 주 출산연령층 여성인구 감소에 따라 앞으로도 출생아 수 감소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표 1>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연도	1970	1980	199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6
TFR	4.5	2.8	1.6	1.5	1.3	1.17	1.19	1.16	1.08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2005, 「여성통계연보」.

-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 0.92명으로 부산(0.88명)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낮은 수준임.
- 급격한 출산율 하락은 평균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우리사회의 고령화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있으나 미래의 변화에 대한 적응기반이 미비한 상태에서 압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는 우리사회의 지속발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 출산의 장애요인

- 200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출산연령대의 국민들이 희망하는 자녀수는 2명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으나 실제 출산율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희망자녀수와 실제출산율과의 불일치는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결혼연령 상승과 출산자녀수 감소로 인해 야기된 저출산 현상은 소득 및 고용 불안정,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자녀양육 부담 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함. 특히 출산을 기피하게 하는 주요 직접적인 원인이 아동양육의 물리적, 시간적, 경제적 부담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저출산 시대의 보육·양육 지원

-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보육지원정책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보다 현실적인 출산장려정책임. 따라서 저출산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 핵심정책에서 보육, 양육지원의 우선순위가 높음.
- 출산율 제고뿐만 아니라 저출산 시대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여성의 노동 참여 확대와 국가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영유아 보육 및 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그러나 보육예산의 획기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신뢰할만한 시설 및 다양한 서비스가 부족하여 보육·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적 지원체계가 미흡하고 서비스 체감도는 낮음. 특히 시설중심의 지원으로 가정내 양육아동에 대한 지원이 미흡함.
- 저출산 극복과 고령사회 적응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 정부의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0)'에서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3대 핵심분야 중의 하나로 선정하고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가족친화적 양성평등적 사회문화 조성'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등을 3대 정책목표로 제시하였음((그림1) 참조).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가족친화적 양성평등적 사회문화 조성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 경감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	이동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학교 사회교육 강화	이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 확립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가족생활 문화여건 조성	

[그림 1]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3대 정책목표

## 2. 보육 및 양육지원 현황 및 문제점

### ○ 보육아동 및 보육시설 현황

- 1990년 이후 보육시설과 이용아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 말 현재 28,761개소에서 1,006,842명의 아동이 보육되고 있음. 이들 시설 중 정부지원시설(국공립, 법인)은 전체의 10.4%에 불과하고,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이 전체의 88.2%를 차지하고 있음.

<표 2> 보육아동 및 보육시설 설치현황(2006년 6월말 기준)

구분	계	국공립 보육 시설	법인 보육 시설	민간보육시설			부모협동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소계	법인외	민간 개인				
시설수	개소	28,761	1,507	1,484	13,855	995	12,860	49	11,575	291
	(%)	100%	5.2%	5.2%	48.2%	3.5%	44.7%	0.2%	40.2%	1.0%
이용 아동	명	1,006,842	112,746	121,396	621,444	556,142	55,302	14,044	136,156	1,056
	(%)	100%	11.2%	12.1%	61.7%	5.5%	56.2%	0.1%	13.5%	1.4%

자료: 여성가족부, 2006, 「보육통계」.

- 우리나라 보육현장은 민간에 의존한 운영형태를 보임으로써 질 높은 보육서

비스 제공 및 관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공립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 영아보육서비스

- 보육취약시기인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영아보육에 대한 요구에 비해 시설이용률은 매우 저조하여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합한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이 19.6%에 불과함.

<표 3> 영유아 육아지원시설 이용률

(단위: 명)

구분	전체아동(A)	육아지원시설 이용아동(B)		시설이용률 (B/A)
		보육시설	유치원	
0세	479,102	25,225	-	5.3%
1세	478,115	79,885	-	16.7%
2세	479,029	176,140	-	36.8%
0~2세(소계)	1,436,246	281,250	-	19.6%
3세	513,930	230,737	74,824	59.5%
4세	594,759	218,063	176,963	66.4%
5세	613,603	194,549	289,816	78.9%
3~5세(소계)	1,722,292	643,349	541,603	68.8%
0~5세(총계)	3,158,538	924,599	541,603	46.4%

자료: 통계청(2005) 「장래인구특별추계」, 여성가족부(2006) 「보육통계」, 교육인적자원부(2006) 「교육통계연보」.

- 최근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영아기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 10명 중 1명은 출산휴가 후 3년 이내 퇴직하고, 그 중 37.3%가 아이를 맡길 적절한 시설이 없어서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아보육서비스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 보육료·교육비 지원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5세미만 영유아에 대해서는 2007년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이하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법정보육료의 20~100%까지 지원되고 있으며, 이외에 만5세아 무상보육교육비, 두자녀이상 보육교육비,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등이 지원되고 있음(<표 4> 참조).

- 그러나 저소득층 위주의 지원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에는 미흡하여 실제적인 지원의 체감도가 낮다고 지적되고 있음. 자녀양육가정의 소득 대비 보육·교육비 지출은 평균 8.3%로 이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가구의 비율이 58.1%에 달함<sup>1)</sup>.

<표 4> 영유아 보육, 교육비 지원 현황(2007년)

구분	지원대상	지원수준	대상자수
차등보육(교육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소득계층에 따라 정부지원단가의 100%, 80%, 50%, 20%	563천명 (+168천명)
만5세아 무상보육(교육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월162천원	152천명 (+152천명)
두자녀이상 보육(교육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둘째아부터	연령별 정부지원단가의 50%	40천명 (+10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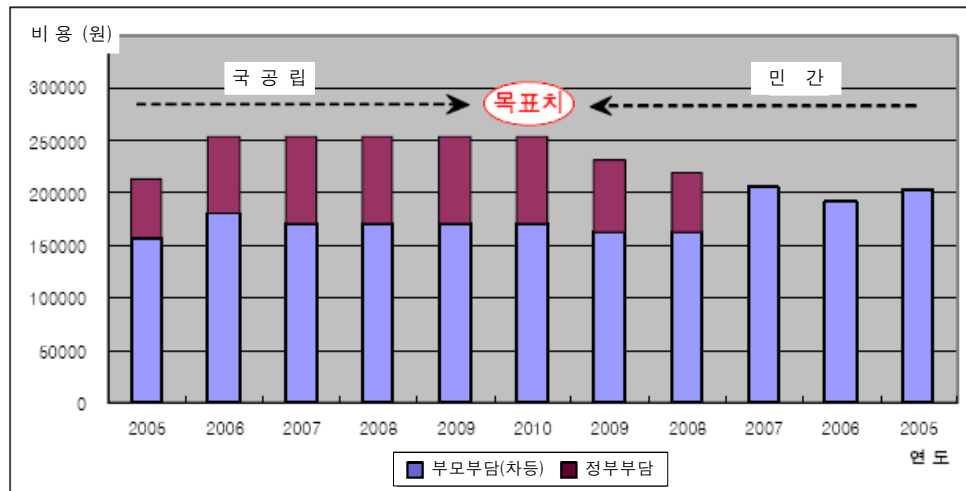
자료: 여성가족부(2006) 「2007년 예산개요」, 교육인적자원부(2006) 「2007년 예산개요」.

○ 기본보조금

- 2006년부터 보육료, 교육료 차등지원과는 별도로 민간보육시설에 다니는 모든 영아에 대해 연령별로 일정한 금액을 기본보조금으로 시설에 지원하고 있으며, 유아에 대해서는 2007년 시범사업 실시 후 확대할 예정임.
- 기본보조금의 도입은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비용을 국공립시설의 보육비용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그림 2) 참조).

1) 여성가족부, 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실태 조사」.

- 그러나 기본보조금은 아동수에 따라 시설이 지원받는 총액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서비스 개선이나 교사인건비 등과 직접적으로 연계하기 어려움. 또한 시설이용가구의 아동은 부모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받는 반면 시설미이용가구의 아동은 저소득층이어도 혜택이 없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자료: 서문희 외, 2006,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육아비용 적정 분담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그림 2] 만3세아 부모-정부 보육비용 분담 비율 변화

#### ○ 취업모에 대한 보육·양육지원

- 산전후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는 취업모의 양육권을 지원함과 동시에 일-가정 양립을 보장해줌으로써 출산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적극적인 저출산 대책방안이 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상 출산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산전후휴가가 보장되며 이 기간중 지급되는 급여는 고용보험과 사용자가 부담함. 또한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만1세미만의 영아양육을 위해 1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2007년부터 50만원으로 인상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됨.



- 그러나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 동료근로자의 업무부담 가중 등으로 육아휴직 활용이 저조함. 2005년 산전후휴가 사용자 중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은 26%에 불과하며 육아휴직급여 수혜자 중 남성 비율은 1.8%로 남성근로자의 출산·육아에 대한 참여가 극히 저조함.
- 취업모 자녀의 보육비용 지원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가구소득에 따른 차등보육료 지원과 시설에 지급되는 기본보조금으로 통합되어 있음. 그러나 취업모의 경우 보육시설을 포함한 육아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비용부담도 높음(<표 5> 참조). 특히 개인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전체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재의 시설위주의 지원체계로는 취업모 양육지원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5> 영유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

(단위: %)

구분	보육교육기관	특기보습학원	방문지도학습지	개인양육지원
전체	54.1	8.7	29.6	20.2
취업모	69.1	10.6	27.6	48.1

자료: 여성가족부, 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실태 조사」.

### ○ 방과후 보육

- 보육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으나, 현재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실시되고 있어서 프로그램 상호협력 및 연계체계 구축이 필요한 실정임(<표 6> 참조).

&lt;표 6&gt; 방과후 활동 운영현황(2005년)

구분	사업명	시설현황	수용현황	주요기능
여성가족부	방과후 보육	1,459	20,159	보육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902	23,000	학습지도 및 보호, 급식 등 종합서비스 제공
	방과후 교실	681	15,538	보육교육 프로그램 제공
교육인적자원부	방과후 학교	48	85,000	특기적성교육, 보충학습, 방과후교실 통합운영
청소년위원회	청소년 공부방	623	48,843	학습공간 제공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100	4,200	특기적성교육, 보충학습, 급식 등 종합서비스 제공

자료: 기획예산처, 2005, 「아동,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체계 개선방안」.

### 3. 보육·양육지원정책의 주요 이슈

#### 1) 자녀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 아동수당 도입

- 아동수당제도는 소득이나 모(母)의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보편적인 가족 복지제도임. 프랑스, 호주 등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자녀양육지원정책으로 좋은 결과를 얻고 있음.
- 우리나라의 양육비 지원은 저소득층이나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의 형태이며 전반적으로 대상의 범위가 좁고 그 지원수준이 취약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양육비용을 사회가 부담하는 보편적인 제도로써 현금 급여인 아동수당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체로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라 수당금액의 차이를 두고 있음. 이는 자녀수가 많은 가정에 좀더 많은 유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출산장려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음.

- 출산율을 높이고 양질의 사회구성원을 양육하는 방안으로 아동수당 도입이 필요함. 장기적으로는 보편적 아동수당을 목표로 하되 단기적으로 아동빈곤을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관련 수당제도 도입 검토가 제안됨.

○ 기본보조금제도의 재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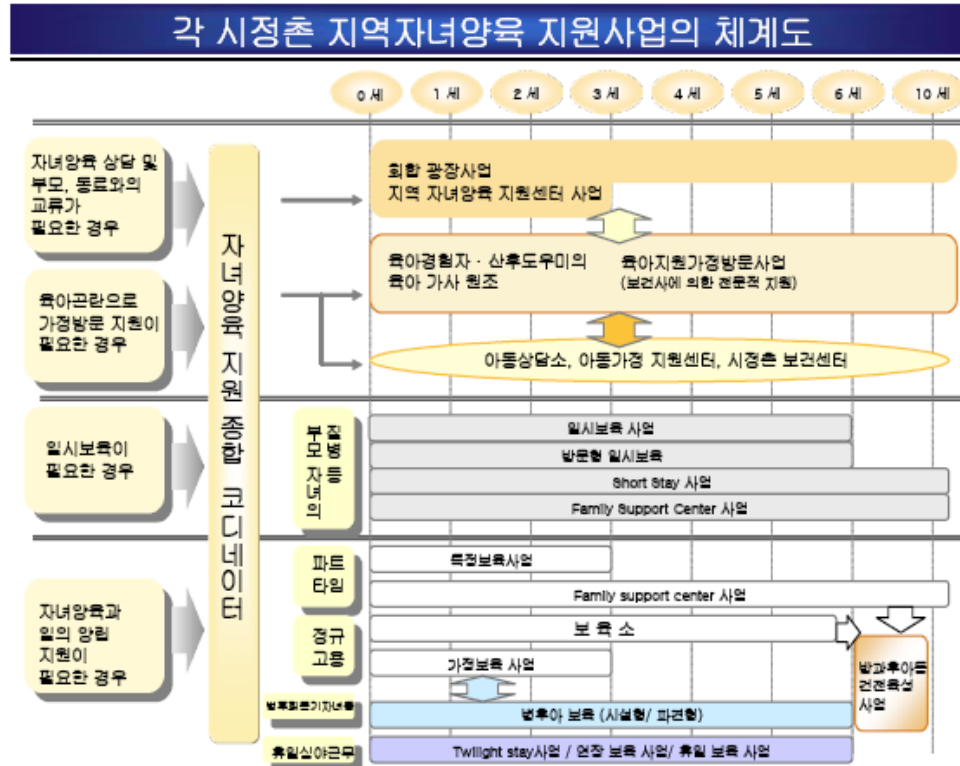
- 기본보조금은 시설로 지급되는 시설지원금과 아동별로 지급되는 아동별지원금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 효과를 정의하기가 어려움. 특히 시설에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보육서비스의 수요자인 부모의 정책적 체감도가 낮음.
- 모든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 지급은 시장경쟁에서 퇴출될 일부시설을 유지시켜 보육서비스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이라는 목적에 반하는 효과를 낼 수 있으며, 또 특정한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운영비 지원방식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음.
- 기본보조금의 총액을 감소하고 차등보육료를 통한 수요자보조금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2)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확충

○ 아동양육지원의 다각화

- 아동양육지원정책은 지역별, 계층별, 아동의 연령별, 부모의 근무조건별로 개별화된 지원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함.
- 구체적인 보육수요 파악에 기초하여 보육수요의 내용(일시보육, 야간보육, 휴일보육, 단기보육, 가정방문보육, 상담 등)과 자녀연령(영유아에서 초등생

까지), 부모의 상황(취업여부, 근무조건 등)에 따라 제공가능한 보육사업체계를 도를 작성하여 보육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그림3) 참조).



[그림 3] 일본의 지역사회 아동양육지원 사업 체계2)

○ 영아보육 지원 확대

- 우리나라의 보육환경은 유아보육 중심으로 확충되어왔기 때문에 취업모 지원기능이 강한 영아보육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영아기 보육으로 부모들이 선호하는 가정내 보육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유럽연합 중심의 보육선진국과 북미의 국가들은 가정내 보육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시설보육의 취약시기인 영아보육을 지원하고 있음.

2) 한국여성개발원, 2004, 「저출산시대의 여성과 국가대응전략」, p.225에서 발췌함.

- 정부는 1996년부터 영아전담시설 지정제도를 추진하여 왔으나 영아전담보육 시설이나 기존의 보육시설 영아반의 이용률이 71%에 그치고 있음. 이는 영아보육시설의 공급확대 이외에 부모들이 영아기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임.
  - 일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자기집에서 3명이하의 0세 영아를 돌보는 보육교사인 '가정보육교사 제도'와 영아의 가정을 방문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방문 보육도우미 제도'의 도입이 제안됨.
- 비공식보육 지원
- 현재 영유아의 10%이상이 이웃탁아모나 조부모에 의해 보육되고 있으나 이들 비공식보육은 정부의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정부의 지원체계에 대한 아동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호주의 경우 보육지원프로그램인 Child Care Benefit(CCB)는 모든 형태의 보육서비스 이용자의 보육료 지원을 원칙으로 하여 친인척에 의한 비공식적 보육이 지원범위에 포함되어 있음.
  - 조부모나 이웃탁아모 등에 의해 제공되는 비공식보육에 대한 지원, 관리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지역내 보육정보센터나 육아지원센터를 통해 비공식보육제공자를 등록, 관리하면서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내 보육자원과 연계를 제공할 수 있음.

### 3) 보육시설 확충과 서비스 질 제고

- 국공립시설의 현실적 확충방안 모색
  - 현재 민간시설 위주로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의 국공립시설

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강하면서 공적재원에 의해 생산, 제공되는 보육서비스는 공공영역에서 기본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민간영역이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더욱이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가 주요한 양육지원정책으로 대두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익추구가 기본이 되는 민간시설이 보육의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시설설치를 위한 예산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부족으로 실제적인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설 설치와 운영비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부족이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민간시설 위주로 짜여진 기존의 보육서비스 전달체계에서 국공립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
-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보육이라는 특수한 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보육교사의 보수수준을 포함한 제반 처우수준은 양질의 보육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음.
  - 시설특성별로 나타나고 있는 근로조건의 차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의 자격 및 학력을 고려한 보수규정이 마련되어야 함. 또한 보육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수당(교사담임수당, 직급수당, 현실화된 수준의 초과근무수당 등) 책정이 필요함.

## 4. 보육·양육지원정책의 기본원칙

- 부모의 다양한 보육·양육 요구 충족과 선택권 보장
  - 시설보육 중심의 지원, 모성보호 위주의 근로자 지원과 보육에 제한하지 않고 보육수요자인 부모와 아동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원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들 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함.
- 일-가정 양립 지원
  - 취업부모를 위한 다양하고 탄력적인 가족친화적 지원정책을 통해 남녀근로자 모두가 직장가정과 가정의 일을 조화롭게 수행하도록 함. 육아휴직을 통해 영아를 직접 돌볼 권리를 보장하고 다양한 휴가제도와 시간단축근무제도 등으로 부모가 자녀를 돌보면서 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
- 아동양육의 공공화
  - 개별가족의 전적인 책임 하에 있던 자녀출산과 양육이 국가와 사회, 가족이 함께 책임져야 할 공적인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 공보육의 확대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부모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출산수준 유지와 더불어 높은 여성취업률을 유지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임.
- 보편적인 지원정책
  - 낮은 출산율은 특정집단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보편적인 현상임. 따라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보육·양육지원정책은 모든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야 함.

## 5. 서울시 보육·양육지원정책 발전방안

### ○ 국공립시설의 확충과 기능 확대

- 서울의 국공립시설 설치비율은 전국평균(5.2%)에 비해 상대적으로는 높으나 여전히 10%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국공립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이 요구됨. 이를 위해 구별 재정자립도를 반영한 서울시 차원의 차등적 지원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신규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특히 동사무소 통폐합에 따라 지역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휴공간에 보육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 보육시설과 육아지원센터의 기능이 복합된 소규모의 국공립시설을 설치하여 육아정보 및 부모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모델시설'로서의 역할과 지역사회 거점시설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

### ○ 보육서비스 질 관리 강화

-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와 부모들에게 시설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실시되는 평가인증제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실시와, 이에 수반되는 교사 교육지원, 대체교사 지원, 관내 인증통과시설 적극 홍보지원 등이 필요함.
- 일본에서는 중앙정부의 보육기준을 근거로 각 지방정부들이 나름대로 좀더 강화된 기준을 수립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서울시의 경우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및 관리 강화 등 자체 보육서비스 기준을 설정하여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보육시설의 환경(안전, 위생, 주변환경) 개선을 위한 지도·관리를 강화하고



지역내 대학, 시설 등의 자원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함. 보육정보센터의 시설 지원기능 강화와 지역보육자원 연계기능 추가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양육지원서비스 활성화

- 저소득층 가족, 한부모가족, 미혼 한부모가족, 장애부모가족, 결혼이민자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의 지원요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야간근무자, 주말근무자를 위한 보육과 긴급상황시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24시간 보육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함. 더불어 이러한 보육서비스를 받는 영유아 가정 전체에 대한 가족지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함.
- 보육시설을 통한 돌봄지원 이외에 아동의 건강, 정서발달, 영양, 자녀교육, 부모자녀관계 확립 등 가정내 양육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서비스가 필요함. 지역내 복지, 보건, 가족과 관련한 서비스와의 연계를 체계화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

○ 비공식 보육 지원

- 개인 서비스 이용 및 비용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개인에 의한 등록보육의 실시를 허용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0세아와 만1세아 취업모 자녀에 한하여 이웃탁아모나 베이비시터, 조부모, 친인척 등이 일정기간 이상 보육할 경우 보육제공자로 등록하고 이들을 육아비용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함.

○ 지역사회 자녀양육지원체계

- 보육시설, 유치원, 방과후프로그램 등 보육양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과 지역내 관련기관(보건소, 교육기관, 행정기관, 복지시설 등), 양육과 관련

한 지역자원(은행, 기업, 병원 등)의 연계가 필요함.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와 기능 확대를 통해 가족지원연계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서울시민의 양육지원 요구를 반영한 양육친화적 지역사회모델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지역공동체모형을 발굴하고 발전시켜서, 서울형 양육친화적/가족친화적 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취약계층 아동과 가정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보육·양육 지원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보육·양육 지원 프로그램은 보육·양육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양육지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사회적 격차로 인한 차별이나 격차를 완화하고 아동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출발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음.
  - 미국의 헤드스타트, 영국의 슈어스타트, 캐나다의 페어스타트 사업과 우리나라에서 지역복지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위스타트사업, 최근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희망스타트 프로젝트와 같은 아동중심의 스타트 프로그램이 서울시에서도 각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형태로 적극적으로 확대 실시될 필요가 있음.

김선자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02-2149-1277  
sunjakm@sdi.re.kr

